



우주형 |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장

인권과 복지의 시대 21세기를 여는 충청남도

지난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이 있었다. 이 날은 충남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10월 5일 충남도민의 날에 맞춰 행사일을 잡고(10월 5일이 공휴일이라 부득이 다른 날 열림), 도민의 날을 상징하는 105인의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을 모집·구성하여, 도민인권증진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이들과 함께 해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선언문’이 탄생되었다. 인권선언문은 전문과 본문 6장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충청남도민 인권선언은 ‘인권이 꽃피어나는, 전 인류를 향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청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이다.

충남은 2012년 도민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에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충남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민의 권리장전도 함께 제정하자는 뜻으로 ‘충남도민 인권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도 실시되었는데, ‘충남도내 인권존중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3 정도만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또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5 정도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대상으로 경제적 약자층인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여성 등을 꼽았고, 인권침해 발생원인으로 경제적 지위, 학벌, 성별, 나이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제 인권의 문제는 국가의 과제일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서도 중요한 지표로서 부각되는 시기가 되었다. 어쩌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지방자치가 실현해야 할 주요 가치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의 인권 신장인지도 모른다. 인권이 꽃피는 지역이야말로 가장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선 6기 지방분권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충남의 현재가 향후 달려 나아가야 할 미래 지향점은 바로 인권과 복지의 시대를 여는 21세기 충남을 만드는 것일게다. 인권은 더 이상 추상적인 화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권을 구체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복지의 실현과 무관하지 않다. 즉,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돈 보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권의 우선순위에 의해 돈이 쓰여지는 사회가 바로 인권과 복지를 아우르는 사회라고 본다. 인권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인권이 꽃피는 사회는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다. 돈 안드는 인권은 허구이며, 한낱 구호일뿐이다.

인권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삶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기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의 바람직한 공동체적 사회 경제활동들은 인권을 누리는 과정이며 또한 인권을 누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 현장의 필요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며, 이것이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민선 6기 충남의 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드는 것이 된다. 이 비전처럼 우리 충남이 변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은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경제적 약자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인권 차별의 장벽들을 허물어가는 것이다. 복지의 실현은 생존권을 비롯한 중요한 인권들이 보장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예산 정책에서도 인권과 복지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2015년부터 시작되는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 차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우리의 갈 길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권과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야할 길이며, 21세기 충남이 지향해야 할 언제나 새로운 과제이다.